

‘돈세탁·비과세’ 구멍 송송... 편법 상속·증여 창구로

규제 사각지대 놓인 가상화폐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수면위로
개미들 ‘유료리딩방’ 등서 몰타기만
美·日 가상화폐 제도권편입 가속화
정부, 다음주 관련대책 발표 예정
과세방안·투자한도 제한 등 예상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각종 코인에 몰리면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법 등이 미비해 사각지대가 만연하다. 법이 없는 곳엔 편법이 판치면서 과세부터 관련 범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께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전망이다.

◆(돈)있는 사람은 더 편한 가상화폐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과세 무풍지대’로 불린다. 관련법이 없어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

정부는 내달 말까지 공직자 22만명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가족의 재산변동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신고 재산 항목엔 소유자별 합계액 1000

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을 비롯해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노농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하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 및 증여에 세금을 물지 않는 것도 문제다.

특히 증여세는 현재 부부간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등의 한도를 넘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에게 5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려면 72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부모가 5억원어치 가상화폐를 사서 자녀의 코인 지갑에 보내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의 테두리도 벗어나 있다.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가 자본시장법 4조10항이 정의하는 기초자산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료리딩방’이 성행하는 이유다. 유료리딩방은 월 50만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고액 회비를 내고 가상화폐 투자 종목·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폐쇄 커뮤니티지만, 자본시장법을 적용받지 않아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

◆법안 발의 잇따라...규제는 추가 또 추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편법과 불법 정 사례 등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13일 가상화폐 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미성년자·외국인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입·출금 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했다.

지난달 28일엔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과세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도입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확인을 거쳐야 계좌가 발급되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은행들은 이달 말 실시되는 실명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 가능한 정부 TF에서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부과하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주 중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또 한 차례 내놓을 방침이다. 대책에는 가상화폐 투자 한도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일지〉

시기	내용
11.28	이낙연 국무총리 “가상화폐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병리현상 벌어질 것”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화폐 시장이 자금세탁 통로 되지 않게 할 것”
12.04	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
12.08	정부,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및 국내 거래소 거래 원칙 금지 방안 검토
12.13	정부,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 발표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신규투자 금지,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불가 -입출금시 본인 확인, 가상화폐 거래 규제할 법정 근거 마련 예고 등
12.15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 관련 7대 자율규제안 발표 -거래소실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예치금 70% 이상 외부장치에 보관 -본인확인 한 개의 계좌로만 입출금 가능 등
12.20	과기정통부, 빙썸코인원코빗업비트에 ‘SMS 인증 의무대상’ 통보 정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 추가 발표 -거래소 폐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가상화폐 실명제 등
12.28	-가상계좌 신규 발급 즉시 전면 중단, 신규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2018년 가상통화 관련범죄 집중단속 계획, 불법행위시 법정최고형 구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게시
18.01.11	박상기 법무부장관 “거래소 폐쇄법안 준비중”
1.15	최종구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욕 먹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금감원, 가상화폐 거래 관리감독위한 TF 구성
1.16	김동연 부총리 “과세 포함한 종합적인 가상화폐 규제 대책 내놓겠다”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
1.17	금감원 가상화폐 TF 첫 회의

화물 위치·상태 등 실시간 공유 해운·금융·SI 등 ‘미래 신기술’

신기루인가, 혁명인가 코인 이야기

4 블록체인이 열어나가는 미래 세계경제포럼 “10년 내 GDP 10% 블록체인에 저장” IS업계 주도권 선점 경쟁 치열할 듯

한국 정부를 위시한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일사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17일 IT업계에 따르면 투명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도입이 확산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를 다수의 참여자가 나눠 보관하기에 해킹이나 위·변조 위험이 낮은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세계경제포럼은 10년 이내에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201억원 규모이던 국내 블록체인 시장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3562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급성장하는 블록체인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국내 SI업계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삼성SDS다. 삼성SDS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전자인증 플랫폼 ‘레주메’ 개발에 나섰다. 기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아왔다.

삼성SDS는 사내벤처를 통해 레주메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보안이 크게 강화되는 것은 물론 사용자 편의해 개발



홍원표 삼성SDS 사장이 지난해 ‘머니 20/20 유럽’에서 블록체인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SDS

이 완료되면 기존 전자인증 방식을 빠르게 대체할 전망이다. 국가 단위 인증시장을 선점하고 동남아시아 전자인증·전자정부 사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삼성SDS의 목표다.

금융과 해운물류에도 삼성SDS의 블록체인이 적용되고 있다. 삼성SDS는 지난해 제휴사, 금융기관과 사이에 안전한 거래를 하도록 돕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를 선보였다. 삼성카드에도 채택돼 전자문서 원본 확인, 생체인증, 제휴사 자동 로그인 등에 적용됐다. 지난해 말에는 해운물류 분야에 적용, 회사별로 문서 양식이 달라 공유되지 못했던 화물 운송 정보 추적과 수출입 관련 서류 위·변조 예방, 발급절차 간소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SK(株) C&C 역시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해운물류 서비스를 개발했다. SK(株) C&C는 종이 장부를 통해 거래를 기록하는 물류 시장의 열악한 상황에 주목해 선주와 육상 운송업자, 화주 등 관계자 모두가 화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췄다. 화물의 컨테이너별 위치는 물론, 온도, 습도 등의 정보가 실시간

으로 자동 수집되며 관계자 전원에게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인위적인 개입은 모두 차단된다.

이전까지 선박을 통해 운송된 물류는 배에서 내린 뒤 트레일러 차량으로 옮겨질 때 내용물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기록해야 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로 컨테이너별 화물 상태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에 중간에서 이를 점검하고 기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LG CNS도 금융권 블록체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 최대 금융특화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파트너십을 맺고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국내외 22개 은행이 참여하는 R3의 ‘국제자금이체 파일럿 프로젝트(아인트)’에도 참여했다. 이 성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는 높아지고 있다”며 “각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 sesung@

20만명 넘는 가상화폐 국민청원 靑 “기존 의제 포함 순서대로 답변”

거래소 폐쇄 놓고 혼선 빚어 공분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 조정”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지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추가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청원 내용이 30일간 20만명 이상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2월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국민청원은 이달 27일이 만기이지만 이날 현재 참여인원이 21만명을 넘어서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관련 내용을 청원한 아이디 ‘kako***’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며 거래실명제, 세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만 선진국에선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나가는 데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만이 넘는 기존 의제 등을 포함해 순서대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열풍을 놓고 ‘거래소 폐쇄’, ‘폐쇄 사실 무근’ 등 혼선을 빚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이름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입장문에서 정부는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되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상화폐를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 등을 우려해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나간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출입기자들간 신년감담회 자리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폐쇄’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언론이 앞뒤 잘라 전달하다보니 오해가 있었지만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정상”이라면서 “(가상화폐 관련)정부 입장은 앞서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최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민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가 두나무 등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기업에 4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해명자료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로 412억원의 투자금액은 이들 16개 창투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총금액으로 출자지분을 고려할 때 모태펀드에선 실제론 36억4000만원만 투자했다”고 밝혔다.